

제311회 국회(정기회)

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12. 10. 9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주요 추진과제	7
1.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·콘텐츠 경쟁력 제고	7
(신산업 및 벤처 활성화,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, 콘텐츠 경쟁력 강화)	
2. 성공적 디지털전환 완료 및 상생·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	19
(디지털전환 성공적 완료, 방송통신 시장경쟁 활성화, 상생·협력 시장환경 조성)	
3.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 및 사회적 약자 배려	29
(생산적 소통사회 실현,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, 이용자 중심의 권익증진)	
III. 주요 현안과제	38

I. 일반현황

1 주요업무

□ 소관사무(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1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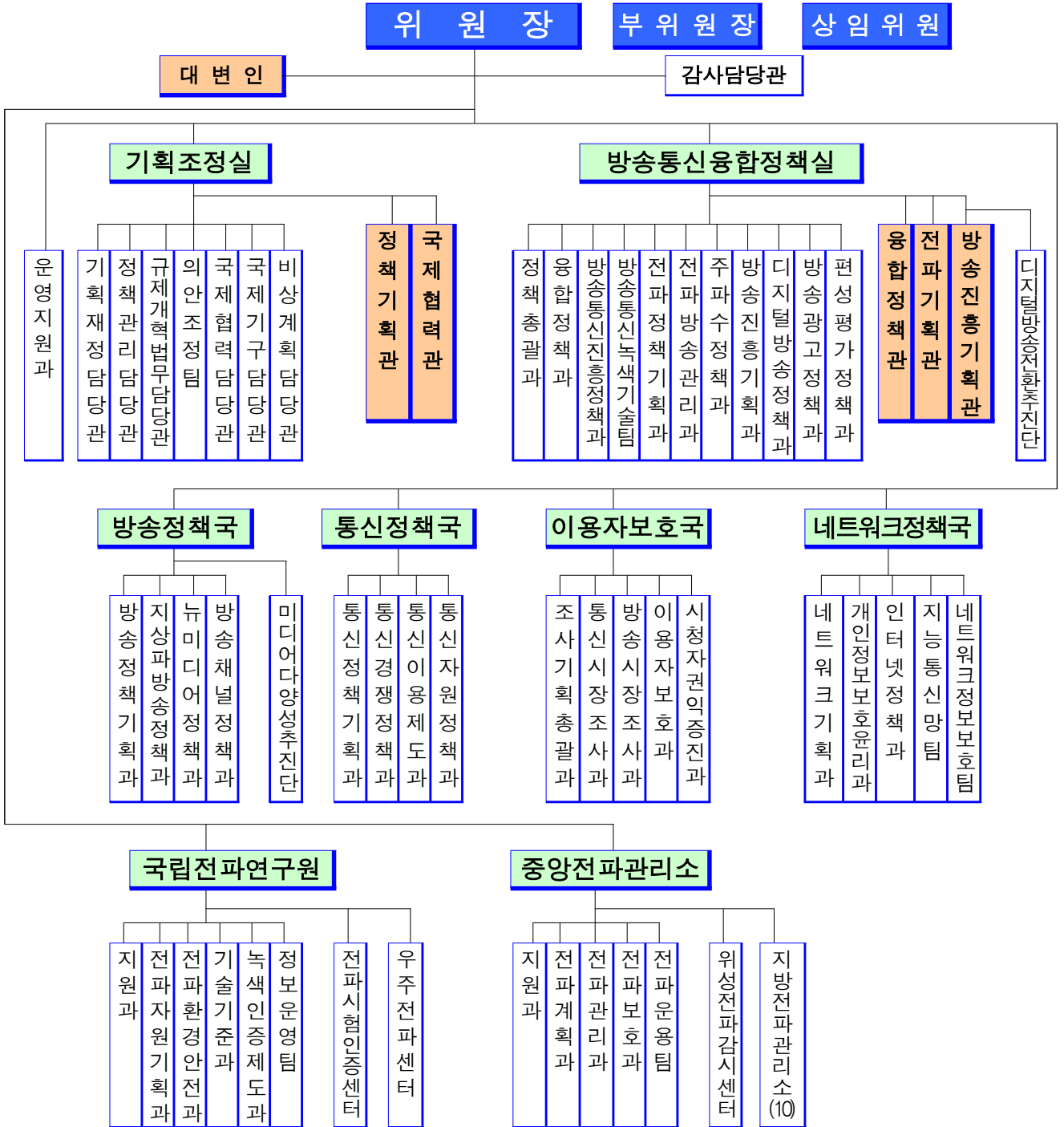
- 방송에 관한 사항
- 통신에 관한 사항
-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

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(민간독립기관)가 수행(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18조)

□ 주요기능

- 방송통신융합정책 수립, 융합서비스 활성화 및 관련 기술개발,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
- 방송·통신정책 수립, 방송·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수립
- 광대역통합망 고도화,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
-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,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등

< 방송통신위원회 >



□ 인 원

(’12. 10월 현재)

구 분	총 계	정무직	일반직	기능직
계	1,615	5	1,241	369
본 부	501	5	448	48
소속관서	1,114	-	793	321

□ 부서별 기능

○ 본부

부 서	주 요 업 무
기획조정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책 및 예산(기금포함)의 종합·조정, 대국회 업무 ○ 조직·정원, 법무·규제개혁, 부내정보화 및 재무관리 ○ 방송통신 국제협력·통상대응 및 정책홍보 ○ 위원회 회의 및 운영 지원, 비상계획
방송통신융합정책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통융합 촉진 및 서비스 활성화, 방송통신기술 개발 ○ 방송프로그램 제작 활성화, 전문인력 양성 등 ○ 전파진흥정책 수립, 주파수 분배·할당 및 무선국 검사 ○ 방송의 디지털전환 촉진, 방송편성 및 평가분석 정책
방송정책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정책 수립 및 방송시장 경쟁 활성화 ○ 지상파·유선·채널사용방송 관련 인·허가 ○ 지역방송 균형발전 지원
통신정책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통신정책 및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정책 수립 ○ 통신사업자 인·허가 ○ 이동전화 이용제도 및 통신요금정책
이용자보호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 ○ 방송통신 사업자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조정 ○ 방송 소외계층 지원정책 수립 추진
네트워크정책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통신망 고도화 및 안전성 제고 ○ 유무선 인터넷 활성화 ○ 정보보호 및 인터넷 역기능 방지 등

○ 소속기관

기 관 명	주 요 업 무
국립전파연구원	전파자원 및 전파이용방법의 개발·연구 등
중앙전파관리소	불법 무선국 단속, 전파감시 및 혼신조사·제거 등

3

2012년도 예산 및 기금

□ 세출예산 규모 : 총 1조 1,204억원

- (재원별) 일반회계 2,844억원, 혁특회계 101억원, 방통기금 8,259억원
- (부문별) 방송부문 5,836억원, 통신부문 5,368억원
- (기능별) 인건비 967억원, 기본경비 153억원, 주요사업비 7,293억원,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2,791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11년도 (A)	'12년도 (B)	증 감	
				(B-A)	%
총계 <I+II> (총지출=총계-내부거래-보전지출)		8,653 (7,730)	11,204 (8,413)	2,551 (683)	29.5 (8.8)
재원별	I. 예산	3,208	2,945	△ 263	△ 8.2
	□ 일반회계	3,050	2,844	△ 206	△ 6.8
	□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	158	101	△ 57	△ 36.1
	II. 방송통신발전기금 (총지출=총계-내부거래-보전지출)	5,445 (4,522)	8,259 (5,468)	2,814 (946)	51.7 (20.9)
분야별	□ 통신분야	5,409	5,368	△ 41	△ 0.8
	□ 방송분야(문화 및 관광) (총지출=총계-내부거래-보전지출)	3,244 (4,522)	5,836 (3,045)	2,592 (724)	79.9 (16.0)
기능별	□ 인건비	947	967	20	2.1
	□ 기본경비	158	153	△ 5	△ 3.2
	□ 주요사업비	6,626	7,293	667	10.1
	○ 방송통신융합 촉진과 디지털방송전환	1,425	2,055	630	44.2
	○ 방송통신서비스 품질제고 및 이용활성화	975	1,016	41	4.2
	○ 네트워크인프라 고도화와 정보보호 강화	900	809	△ 91	△ 10.1
	○ 이용자 권익증진과 공정경쟁 환경조성	232	235	3	1.3
	○ 전파방송산업 여건조성과 해외진출지원	765	697	△ 68	△ 8.9
	○ 방송통신 연구개발 및 진흥기반 조성(R&D)	1,993	2,085	92	4.6
	○ 기타 행정지원	336	305	△ 31	△ 9.2
	□ 내부거래(공자기금예탁)	500	200	△ 300	△ 60.0
	□ 보전지출(기금 여유자금운용)	422	2,591	2,169	514.0

4

소관법률 및 주요 유관기관 현황

□ 소관 법률(16개)

구 분	법 률 명
융합분야 (3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○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
방송분야 (5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법 ○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○ 한국교육방송공사법 ○ 방송문화진흥회법 ○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
통신분야 (7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기통신사업법 ○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○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○ 전기통신기본법 ○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○ 정보통신공사업법 ○ 통신비밀보호법
전파분야 (1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파법
합 계	16개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
한국방송공사 (KBS)	김인규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,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43조 (설치 등)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곽덕훈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분야 방송 콘텐츠 제공 및 교육방송에 관한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김재우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	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이원창	광고판매대행, 방송광고균형발전, 방송통신광고 진흥사업 및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 등	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(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의 설립)
한국인터넷진흥원 (KISA)	이기주	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차세대 인터넷 기술 선도,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,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,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 및 불법스팸 대응 등	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(한국인터넷 진흥원)
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(KCA)	양유석	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연구, 방송·통신·전파에 관한 연구 지원 및 교육,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·운영 관리 등	전파법 제66조 (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)

Ⅱ. 주요 추진과제

1 방송통신 일자리 창출 및 네트워크·콘텐츠 경쟁력 제고

1-1. 신산업 및 벤처 활성화

◆ 스마트TV, 클라우드, 근접통신(NFC) 등 시장성장 가능성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7대 신산업과 벤처 육성 등을 통해 젊은 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

가. 스마트 신산업 육성

□ 개 요

- 스마트TV, 클라우드, 근접통신(NFC), 사물인터넷, 위치기반서비스 등 시장성장 가능성 및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스마트 신산업 활성화

□ 추진 실적

- (방송통신 R&D 등) '12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(2월), 수행기관 선정(3, 5월), 과제 진도점검(6~7월), '13년도 기술수요조사 실시(8월), 과제기획위원회 운영(9월~)
- (근접통신) 9대 전략 가맹점 대상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전국 서비스 제공(2월), 여수엑스포 NFC 시범사업 운영(5~8월), 서울 시내 역사 유적지 안내사업 실시(9월)

※ 9대 가맹점 : 홈플러스, 롯데마트, GS25, 웨미리마트, 스타벅스, 카페베네, SK에너지, GS칼텍스, 롯데백화점

- (3DTV 방송) DTV 임시채널(CH.66)을 활용하여 런던올림픽 고화질 3D 생중계를 추진, 국민 인지도 제고 및 생방송 운영 검증

< 런던올림픽 3D 방송 개요 >

- (실험국 허가) 3D콘텐츠 송출을 위한 관악산 CH.66 허가
- (중계 일시) 7.28~8.13, 17:00~08:00(한국시간)
- (중계형태) Live 생방송 + 주요장면 하이라이트
- (주요 경기) 수영(박태환), 체조(양학선), 육상, 농구, 다이빙 등
- (수신가능 가구수) 직접수신 5만가구, 스마트TV(어플) 150만 가구 추정

- (TV 전자상거래) 스마트 기기와 연계한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프로젝트 선정(5월) 및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중간점검(7월)
- (위치기반서비스) LBS 사업자간 정보 공유, 상담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'LBS 비즈니스 지원센터'를 운영하고, 중소 LBS 사업자간 공동구매 활성화 등을 위해 'LBS 상생전략 포럼' 구성·운영(5월~)
 - 중소·벤처 LBS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및 후보작(5개) 선정(8월)
- (클라우드) 이용자의 신뢰 기반 구축을 통한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해,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·시행(2월)
 - 「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마련(6월)
- (스마트TV) 웹(HTML5) 기반 개방형 TV 플랫폼 표준화 계획(5월) 수립, TV 앱 개발 활성화 지원계획 마련(6월) 및 「TV 앱 개발 센터」 구축·운영(7월)
- (사물인터넷) 글로벌 사물인터넷(M2M) 표준 협력체 출범에 대응하여 TF를 구성·운영하고, M2M 응용서비스 국내 표준화 추진
 - 주요분야별 M2M 서비스 표준화 컨소시엄 구성(7월말)
 - ※ 4대 분야(스마트홈, 스마트카, 헬스케어, 스마트그리드), 12개 업체

□ 향후 계획

- 「클라우드 법」 제정(관계부처 협의, 입법추진 등)
- 「사물인터넷 활성화 종합계획」 수립(10.30)
- 정규방송채널을 통하여 전국규모로 지상파 3D 고화질 시범방송 실시
 - ※ 10월 중순부터 SBS(수도권), MBC·EBS(전국) 시범방송 예정
- 서울 시내 주요 박물관, 전시관 등에 NFC 서비스를 체험해 볼 수 있는 '스마트 서울' 시범사업 실시('12.10월~'13.2월)
- 신규 IT 서비스(빅데이터, 스마트워크 등)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지원 방안 마련(10.30)
- '13년도 방송통신 R&D 신규과제기획위원회 운영(~11월)
- '13년도 신규과제 선정 및 방송통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(12월)
-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해 LBS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, 정책 토론회, 전략 컨퍼런스를 포함하는 'LBS 페스티벌(가칭)' 개최(12월)
- 스마트 기기와 연계한 양방향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완료 및 결과 보고(12월)

나. 중소벤처 육성

□ 개요

- 글로벌 생태계 경쟁 추세에 대응하여 중소벤처 활성화 전략 수립, 벤처 창업 및 취업 지원, 기술경쟁력 강화 등 중소벤처 활성화 지원
-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통신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

□ 추진 실적

- 인터넷 스타트업 육성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구글과 체결(1월)하고 유망 신생벤처의 창업 촉진을 위해 「글로벌 K-스타트업 프로그램」을 추진(4월~)
 - ※ 글로벌 K-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30개팀을 선정(2~3월)하여 개발지원
- 청년 취업난 및 중소기업 인재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관련 마이스터高 및 대학을 직접 찾아가는 '현장형' 취업박람회 개최
 - ※ 성균관대(6.8), 미림여자정보과학고(6.12), 부산 벅스코(9.6), 대구대(9.20)
- 非 수도권 지역(5개 권역)에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 지원센터(SMAC)를 구축(2월)하여 앱 개발자 및 중소기업에 테스트 환경 지원
 - ※ 5개 권역 스마트 모바일앱 개발 지원센터를 통해 5,184건 이용(8월말 현재)
 - [동남권]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컨소시엄(1월), [호남권]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컨소시엄(1월), [충청권] 대덕인재개발원 컨소시엄('11.12월), [대경권] 대구대학교 컨소시엄(2월), [강원권] 강릉원주대학교(1월)
- 성장 단계별(창업기·성장기·정체기·재도약기)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과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'방송통신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' 수립(3월)
- 일자리 대책 관련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대·중·소·1인 창조기업, 고교, 대학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(4월, 5월)
- '14년까지 방송통신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핵심과제를 담은 '청년희망, 창의일자리 대책' 수립(5월)

< 3대 전략 및 핵심 추진과제 >

① 창업형 고용 확대

- 앱 개발·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, 1인 창조기업 등을 위한 창업기술·경영교육-창업자금-해외진출 원스톱 지원
- 창업 초기기업 전용 R&D 신설, 청년 창업 붐 조성을 위한 방송물 제작 등

② 고용 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

- 차세대 융합·모바일, 스마트광고 및 전파 분야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확대
- ‘모바일·미디어 취업박람회’ 개최 및 고교·대학생 대상 멘토링 제공 등

③ 성장-고용-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

- 스마트 신산업 육성, 정부지원사업 인건비 확대, 해외 인턴 도입, 스마트 워크 활성화, 근로자 처우 개선 등

- 초소형 기지국 등 중소기업 특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, 중소벤처 기술지원을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테스트베드 구축(5월)

□ 향후 계획

- 모바일 분야 청년 개발자에게 이론 및 현장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‘청년 개발자 멘토링 프로그램’ 실시(10월)
- 근거리 무선통신 분야 중소벤처 대상 기술컨설팅 제공(10월 중순~)
- 일자리 창출정책 이행점검을 위한 ‘방송통신 일자리 TFT’ 개최(10.26)
- 방송통신 R&D과제 성과 전시회 개최(11월)
- ‘글로벌 K-스타트업’ 우수팀 창업자금 및 해외진출을 지원(~12월)하고, ‘현장형 취업박람회’ 추가 개최(4분기, 3회)

1-2.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

◆ LTE 서비스 전국 확대 등을 통한 투자확대 유도 및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 증가에 대비한 신규 주파수를 확보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

가.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

□ 개요

- 현재보다 10배 빠른 Giga급 인터넷 상용화를 통해 유무선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고,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 유지

□ 추진 실적

- 통신사, 네트워크장비 제조업체, 정보화진흥원(NIA), 전자통신연구원(ETRI)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발전협의회 운영(3월~)
 - Giga 인터넷 상용화 및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논의 등
- Giga 인터넷 시범서비스 수행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(4월)
 - KT 컨소시엄, SKT 컨소시엄, LGU+ 컨소시엄, CJ헬로비전 컨소시엄, T브로드 등 5개 사업자
- 이통3사는 전국 84개 시 지역까지 LTE 망 구축을 완료하는 등 LTE 서비스 지역을 확대(5월)

< 사업자별 LTE 구축 현황 및 계획 >

구분	'11.12월	'12.6월	'12.12월
SKT	- 서울시 전역 - 고양/안양/성남 일부	- 전국 84개 시(4월) - 전국 읍/면 단위까지 확대(6월)	-
KT	-	- 서울(1월), 25개 시(3월) - 전국 84개 시(5월)	- 전국 읍/면 단위까지 확대(12월)
LGU+	- 전국 84개 시	- 전국 읍/면 단위까지 확대(3월)	-

- 여수세계박람회 행사 관련 Giga 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(5월)
 - 105개국 해외 참가자 등이 숙소로 이용하는 여수엑스포 아파트 500가구에 Giga 인터넷 제공
- 공공장소 1,000개소 통신 3사 Wi-Fi 공동구축 및 개방(6월)
 - 전국 관공서 민원실, 터미널, 문화시설 등 공공장소 1,000개소에서 무료 Wi-Fi 서비스를 제공하여 무선인터넷 이용편의성 제고
- 마이스터高 대상 Giga 인터넷 현장체험 교육 실시(7월, 8월)
 - 5개 Giga 인터넷 시범서비스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수도권전기공고, 원주의료고, 금오공고, 강서공고 등 재학생 86명 참여
- Giga 인터넷 활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연(9월)
 - IT 엑스포 부산 전시회에서 Giga 인터넷 기반 국내 최초 UHD급 초고화질 서비스, 무안경 3D 디지털 사이니지 등 6종 시연

□ 향후 계획

- Giga 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(10월~)
 - 서울, 부산, 여수, 세종시 등 17개 지역, 7,000여 가구
-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완료 및 점검(10~11월)
 - 금년 50가구 미만 소규모 농어촌 지역 925개 행정리의 망구축 실적
- 트래픽 폭증 및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유·무선 네트워크 자원 및 트래픽 현황 등을 포함하는 트래픽 지도 구축
 - 트래픽 지도 구축방안 마련 및 트래픽 지도 구축 완료(12월)
- Giga 인터넷 상용화 추진 진행상황 점검(12월)
- 이통3사 LTE 망을 전국 읍·면 단위까지 확대(12월)
- Giga 인터넷 상용서비스 확산, 농어촌 BcN 구축 활성화, 공공 Wi-Fi 확대 등 중장기 네트워크 발전전략 수립(12월)

나. 모바일 광개토 플랜 추진

□ 개 요

-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('12.1.20)하고 관련 후속조치 추진

※ '09.11월 스마트폰 도입 이후 현재까지('12.7월) 모바일 트래픽은 약 114배 증가했고, '11.9월 대비 '20년까지 11~13배 증가 전망

□ 추진 실적

- '20년까지 600MHz 폭 이상 신규 주파수 확보·공급을 위한 계획 마련

< 「모바일 광개토 플랜」 >

확보시기	단기(~'13년)	중기(~'16년)	장기(~'20년)
주파수 (폭)	700MHz대역(40MHz) 2.1GHz대역(60MHz) 1.8GHz대역(70MHz)	2.6GHz대역(30MHz) 2GHz대역(40MHz) 3.5GHz대역(160MHz)	추가확보대역 (200MHz)
합 계	170MHz	230MHz	200MHz

- 가용 주파수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
 - 공공용 1.8GHz대역(국제 이동통신 대역)을 이동통신용으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공유방안 검토(2월~)
 - 한·일간 주파수 조정 회의(4월) 및 국제회의(APG·AWG, 9월) 등을 통해 2.6GHz대역 조정 협의방향 논의
 - ※ AWG : 아태 무선통신그룹, APG : 아태 세계전파통신회의 준비회의
 -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발굴을 위한 「IMT 후보대역 평가반」을 운영하여 후보대역 우선순위 선정(6월)

□ 향후 계획

- 단기 확보가능 주파수를 대상으로 할당방안 검토(12월)
- 주파수 공유 및 양도·임대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·제도 개선('13년)

1-3. 콘텐츠 경쟁력 강화

◆ 규제완화 및 신규 스마트 광고시장 창출로 광고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·유통기반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

가.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도입

□ 개 요

- 「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2.22)에 따라 방송광고판매 시장의 경쟁 도입을 위한 정부출자공사 설립, 민영레퍼 허가 등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방송광고판매시장 경쟁도입 입법 취지에 따라 기존 ‘한국방송광고공사’를 ‘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’로 개편하여 출범(5.23)
 - 신공사 설립위원회 개최(6회), 임원 선임(5.14), 신공사 출범(5.23)
- 「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민영레퍼 허가, 결합판매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고시 제정
 - 시행령 제정(5.22), 미디어레퍼 허가고시(7.26),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고시(8.17), 중소방송 지원 결합판매고시(9.11) 등 제정
 - 민영 미디어레퍼 허가(미디어크리에이트)로 광고시장에 경쟁 도입(8.22)
- 방송광고 시장의 균형발전과 다양성 실현을 위하여 중소방송사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
 - 미디어레퍼별 결합판매 지원 중소방송사 지정, 각 중소방송사별 지원 규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결합판매고시 제정(9.11)

□ 향후 계획

- 방송광고 진흥 전략방안 마련(12월)

나. 콘텐츠 제작·유통기반 강화

□ 개 요

- 글로벌 생태계 경쟁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·유통 지원, 인재 양성, 인프라 구축 등

□ 추진 실적

-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원스톱(제작, 편집, 송출, 유통 등) 종합시설인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건립

< 디지털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>

- 조성규모 : 부지 10,702㎡(3,237평), 연면적 56,594㎡(17,120평), 지상 20층 지하 4층
- 주요시설 : 스튜디오 6(대형 1, 중형 1, 소형 4), 중계차 2대, 편집실 17개
- 총사업비 : 4년간('10~'13년) 2,276억원(방통위 1,104억원, 문화부 1,172억원)
- 이용대상 :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, 독립제작사 등

- 최적의 방송인프라 구축을 위한 분야별* 기술자문위 구성·운영(2월)
 - * 방송시스템, 중계차, 조명, 유통, 송출, 아카이브, 클라우드, 네트워크·보안 등
- 방통위-문화부간 공정관리 및 업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(2월)
 - * 방통위, 문화부, 사업추진단(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), 감리단
- 지원센터 건립 후 효율적 관리·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·운영(7월)
 - * 방통위, 문화부,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4개 기관 12명 구성
- 현업 방송인의 전문성 강화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방송 콘텐츠 제작 및 융합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
 - 방송 직군별(PD, 기자, 작가 등) 특성화 교육 실시(3월)
 - 미디어 전문인력의 '사회적 재능 기부' 차원의 프로보노* 퍼블릭(Probono Public) 실시를 위한 멘토단 구성(4월)
 - * 개인이 가진 전문지식이나 서비스를 사회적 공익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
 - 현업 방송인대상 공통교육 및 직군별(PD, 방송작가, 방송기자 등) 맞춤형교육 실시(9월 기준 1,700명 양성)

- 콘텐츠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오세아니아(2월), 중앙아시아(5월), 유럽(6월) 등 유망 지역을 중심으로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
- 방송콘텐츠 홍보와 국내 방송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확대 기반 마련
-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'03년 대비 '10년 현재, 6배로 대폭 증가 추세

< 쇼케이스 개최 실적 >

구분	'08년	'09년	'10년	'11년
개최횟수	4	6	5	5
개최국가	프랑스, 헝가리, 베트남, UAE	태국, 프랑스, 미국, 헝가리, 중국, 필리핀	미국, 프랑스, 헝가리, 에콰도르, 우르과이, 말련, 인니	미국, 카자흐, 우즈베크, 브라질, 페루, 콜롬비아, 터키, 이집트, UAE, 루마니아, 폴란드

<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>

(단위:천달러)

구분	'03년	'04년	'05년	'06년	'07년	'08년	'09년	'10년
수출액	35,559	70,306	121,763	133,917	150,953	160,120	170,228	214,942

※ '10년 방송프로그램 국가별 수출은 일본 53.9%, 대만 13.2%, 중국 8.8%, 중남미 7.0% 순
(한국콘텐츠진흥원, '10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과 전망)

- 방송의 공공·공익성 향상, 방송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의 공익적 콘텐츠 및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지원
- IPTV, 디지털케이블TV의 양방향 프로그램 및 다국어 자막서비스 제작지원(4월, 7개 프로젝트 선정)
-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공공·공익프로그램, 3D 콘텐츠, 명품 다큐 등에 대한 제작지원(5월, 112편 선정)
- 제작지원 프로그램 중소방송사 방영권 지원(8월, 39개사 103편 지원)
- 공공·공익프로그램, 3D콘텐츠에 대한 추가 제작지원(9월, 27편 선정)

○ 콘텐츠산업 진흥방안 마련을 위해 스마트 생태계 경쟁 환경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유통환경 분석 및 종합 정책 방안 연구

- 콘텐츠 산업진흥 종합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 구성(5월)

- 콘텐츠 산업 환경분석, 유통·진흥정책 등 연구 분과별 회의 개최(6월)

※ 중소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공동 유통과 N-스크린 환경에서의 유통 전략 수립을 위해 제작사, PP, 유통사가 참여하는 유통분과 협의체 구성(5월)

○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대상을 확대(방송법시행령 및 편성고시 개정·시행, 7월)

- '지상파방송' 외에 '종합편성PP·애니메이션 50%이상 편성 PP'로 확대

□ 향후 계획

○ 콘텐츠 제값내기 캠페인 실시(10.25)

○ 단막극 페스티벌 개최(10.25~10.27)

○ 방송인프라 구축사업 중간보고회 개최(10.26)

○ 해외한국어 방송사 방영권 지원(107편, 10월말)

○ 방송콘텐츠 미개척 지역을 대상으로 쇼케이스 개최(11월)

○ 3D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International 3D 페스티벌 개최(12월)

○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관리·운영 방안 마련(12월)

2-1. 디지털전환 성공적 완료

◆ 전국민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고,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성공적으로 종료하여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

가.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 지원

□ 개요

- '12년 12월 31일까지 지상파 아날로그 TV방송 종료 및 디지털방송 전면 실시를 위해 '11년부터 본격적인 정부지원 실시

□ 추진 실적

- 최소한의 시청권 보장을 위해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는 가구에 대해 DTV 구매보조, 디지털컨버터 등 지원
 - 9.28일 기준, 아날로그방송을 직접수신하는 28.5만 가구에 정부 지원을 완료, 전체가구 중 98.6%는 디지털방송 시청이 가능
 - ※ 현 시점에서 아날로그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는 가구는 1.4%(24.3만)로, DTV 구입, 공시청설비 개선 등 자발적 전환을 고려할 경우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
- 특히, 노인·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이 디지털전환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방문하여 신청 독려, 접수 대행 및 지원 실시
 - 이장·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발굴하고, 신청 독려 및 대행 중
 - 독거노인돌보미를 통해 14.6만명의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정부 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지원 완료(총 7,017명)
 - 자부담금(2만원)이 없어 지원신청을 못하는 독거노인(약 1,500가구), 거동이 불편한 1급 장애인(3.6만명 중 지원대상)에게는 반납컨버터 무상 지원 중

□ 향후 계획

- 디지털 미전환가구 최소화를 위해 정부지원 지속 실시

나. 아날로그방송 순차종료 및 대국민 홍보 강화

□ 개 요

- 전국 동시종료(‘12.12.31일 04시)시 예상되는 대규모 국민 불편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순차종료(‘12.8~12월) 추진 및 맞춤형 홍보 실시

□ 추진 실적

- 지역별로 방송사·지자체 협의를 거쳐 지역별 종료일시 확정(8.16)

< 지역별 아날로그방송 종료일시 >

울산	충북	경남	부산	대전·충남
8월16일 14시	9월24일 14시	10월4일 14시	10월9일 14시	10월16일 14시
전북	강원	광주·전남	대구·경북	수도권
10월23일 14시	10월25일 14시	10월30일 14시	11월6일 14시	12월31일 04시

- 울산(8.16), 충북(9.24), 경남(10.4) 지역 지상파 아날로그방송 종료
-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익광고, 안내포스터 제작·배포, 캠페인 등 디지털전환 안내 및 혜택을 널리 홍보하여 자발적 디지털전환 촉진
-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 대상으로는 지역별로 자막고지방송, 가상종료를 실시하여 원활한 정부지원 유도
- 7월까지 전국의 농어촌 마을이장(1,325개 읍면, 총 33,752명) 독거노인돌보미(243개 시·군, 총 5,395명), 장애인단체(239개 시·군, 총 3,742명) 대상 설명회 완료
- 순차종료에 따른 시청자 혼란 방지를 위해 지역뉴스·특별프로그램, TV 공익광고, 카운트다운 자막 등을 통해 지역별 종료일시 집중 홍보

□ 향후 계획

-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에도 미전환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 신청접수(3개월), 디지털방송전환지원센터(6개월) 연장 운영

다.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

□ 개 요

- 깨끗한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구축을 위해 난시청 해소 및 농어촌 마을·공동주택의 수신설비 개선 등을 지속 추진

□ 추진실적

- '12.6월까지 기간방송국(100%), 방송보조국(107.5%)의 디지털전환을 완료, 위원회·방송사 공동으로 소출력중계기 구축(144개소 중 71개 구축 완료)
- 아날로그방송 직접수신가구가 디지털전환 후 기존 시청했던 채널을 시청할 수 없는 경우, 위성방송수신기 무상 임대(약 3,000가구, 9월기준)
- 위원회·KBS 공동으로 농·어촌 마을 공시청 설비를 디지털방식으로 개선 중(383개소 중 345개소 완료)
- 아파트거주 가구의 공시청설비 개보수 지원 및 개선 유도
 - 공공임대 아파트는 위원회와 LH·SH공사 등과 공동으로 비용 분담하여 전국 804단지 전체 시설의 개보수 완료(6월)
 - 민영아파트는 (재)디지털시청100%·스카이라이프가 공동으로 지원중이며 아날로그공시청 보유단지는 지역별 종료일정을 고려해 우선 지원

□ 향후 계획

- 소출력 중계기 구축 및 마을공시청설비 디지털 전환 완료(~12월)

2-2. 방송통신 시장경쟁 활성화

◆ 방송의 산업성·공익성 조화발전 및 미디어의 여론 다양성 제고 기반 마련, 통신시장의 개방과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

가. 방송시장 활성화·공익성 제고

□ 개 요

- 방송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 및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를 위해 방송 운영시간 확대, 공익채널 선정 등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방송허가 유효기간이 만료(12월)되는 지상파방송의 재허가 심사를 위한 「지상파·지상파DMB 방송 재허가 기본계획 수립」(5월)
- 방송의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「'1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」 결과 산정·공표(7월)
- 공익채널 선정절차 명확화를 위해 구비서류 등을 법제화하고(7월) 장애인복지채널의 의무송출을 위해 인정절차, 운용방법 등 규정(9월)
- DCS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방송관련 법령을 위반한 KT Skylife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중단 시정권고 실시(8월)
-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시청자 권익증진, 편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TV 방송의 운용시간(19시간→24시간)을 확대(9월)
- 공영방송 임원 선임
 - 방문진 이사·감사(7~8월), KBS 이사(8월), EBS 이사(9월)

□ 향후 계획

- 지상파TV 24시간 범위내에서 자율적 방송편성(10월~)
- 방송제도 정비를 위한 '방송제도연구반' 운영(10월~)
- '13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(11월)
- 지상파·지상파DMB 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(11월)
- 시청점유율 산정기준(고시) 개정 완료(12월)

나. 통신시장 경쟁 확대 및 이용자 편익 증대

□ 개요

-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, 단말기 자급제 시행 등 통신시장의 경쟁확대 환경 조성

□ 추진실적

- 이동통신 재판매(MVNO) 서비스(알뜰폰) 활성화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촉진
 - 이용자가 쓰던 번호 그대로 재판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통사와 재판매 사업자간 번호이동 시행(5월)
 -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파사용료 3년간 면제 추진(전파법시행령 개정)
 - 재판매 사업자(CJ헬로비전, 에넥스텔레콤) LTE 서비스 개시(9월)

※ '12년 말 이후 홈플러스, 이마트 등의 대형 유통사업자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

< 재판매서비스 시장 현황 >

- (가입자 수) '12.8월 기준 92.8만명으로 전체 이동통신시장의 1.75% 수준
- (사업자 수) '12.9월 현재 총 24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 중
- (요금 상품) 기존 이통사 대비 평균 20~50% 저렴

- 다양한 자급 단말기의 유통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
 - 전산시스템 개선 및 분실·도난 단말기 정보 통합관리센터 개소(5.1)
 - 이통사 유통 단말기에만 적용하던 요금할인을 중고단말기, 제조사·마트 등이 유통한 단말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(KT 5.31, SKT·LGU+ 6.1)
 - 자급제 홍보포털 사이트 서비스 개시(5.1), 홍보 포스터·리플릿 배포 (이통사, 제조사 등, 5월), 지하철 광고(6~7월) 등 홍보 추진
 - 이통사별 망적합성 테스트(IOT : Interoperability Test)를 한 곳에서 시험해 볼 수 있도록 통합 시험인증 환경 제공(9월)

□ 향후 계획

-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따라 음성·데이터·문자 사용량을 선택할 수 있는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 유도(10월~)
-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'통신망의 합리적 관리·이용 기준(안)' 마련(12월)
 - ※ 기준(안) 공개토론회 개최(7.13)
-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('12년도)를 완료함과 동시에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에서 ICT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도록 개편하는 방안 마련(12월)
- 제조사, 유통업체의 자급제용 단말기 출시 유도 및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(계속)

다. 방송통신 국제경쟁력 강화

□ 개 요

- ITU 전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의 ICT 기술을 알리고 글로벌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며, 기업의 세계 진출 기반을 확충

※ 2014년 ITU 전권회의 일정 및 장소 : '14.10.20~11.7(3주 간), 부산시 벡스코
• 193개 ITU 회원국의 장차관급(150여명)을 포함한 정부대표단 3,000여명 참석 예상

□ 주요 내용

- 전권회의 개최를 통해 ICT 외교 강국으로의 도약과 ICT·한류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확대할 수 있는 행사 마스터플랜 수립

※ [기본계획 수립방향] ① 세계 최고의 회의 운영 ② 세계인이 하나되는 ICT 축제
③ 글로벌 ICT 정책 외교 주도 ④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

- '14.10월까지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기획단계('12.9월~'13.7월) 및 본격 추진단계('13.8~'14.12)로 구분하여 준비 조직 구성·운영

※ 기존 사전준비단을 약 30명 규모의 1단계 준비기획단으로 증원하여 출범(10월 예정)

- 전권회의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로고 공모전, 블로그 개설을 추진하고, ITU 주요 국제행사에서 2014 전권회의 홍보부스 운영

□ 향후 계획

- 공식 준비조직 출범(10월말)
- 전권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국내외 홍보 추진(4분기)

2-3. 상생·협력 시장환경 조성

◆ 홈쇼핑채널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, 포털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 업체의 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하여 대중소 기업이 상생·협력하는 시장환경 조성

가. 상생협력 환경 조성

□ 개 요

- 홈쇼핑방송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,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재송신 분쟁 예방 및 포털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 콘텐츠 업체의 협력을 통해 대중소 기업이 상생·협력하는 시장 환경 조성

□ 추진 실적

- 중기전용 홈쇼핑(홈앤쇼핑)의 개국을 지원(1월)하고 GS홈쇼핑·CJ 오쇼핑의 재송신 심사시 '중소기업과의 상생·협력 방안 마련' 등을 조건으로 부과(2월)
- 방송사업자간 분쟁해결 절차 개선, 방송유지·재개명령권 도입 등 「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(안)」 마련(2월)
- 포털사,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력하여 오픈API*, 최신 ICT기술(HTML5 등) 등에 대한 활용 교육 개최(2회)

* 오픈API(Open 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) :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포털사의 검색, 지도 관련 데이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

□ 향후 계획

- 흡쇼핑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이행점검(연중)
- 오픈API 활용 교육 추가 개최(하반기)
- 지상파방송 재송신 관련 방송법 개정안 마련(12월)

나. 공정한 콘텐츠 거래 활성화

□ 개요

- 외주제작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해 외주제작사·방송사간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하고,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통신사업자, 제조사와 콘텐츠 개발자간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여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

□ 추진 실적

- 외주제작사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방송사업자와의 협력모델 구축 및 외주제작 관련 규제의 명확성 제고
 -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간접광고 수익 동등배분 MOU 체결(2월)
 - 자본·연출 등 제작요소 투입정도를 반영한 외주제작 인정기준 도입(2.23, 편성고시 개정)
- ICT 생태계 확장 및 통신서비스 융합에 대응하여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범위 확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반 구성·운영(3월~)
-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위원회」 구성(4월), 「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계획」 수립(5월), 「'12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시장획정(안)」 마련(9월)

-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)의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방송프로그램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(5월)
- SO, IPTV사업자 등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 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채널계약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(7월)
- 현행 이동통신사-CP간의 불공정 수익배분 금지행위 규정을 포털 등 유선 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(6월)
- 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시장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확대
 - 기존 이통사 오픈마켓에서 제조사 오픈마켓(삼성전자 삼성앱스, LG 전자 스마트월드)으로 확대(6월)

□ 향후 계획

- 유선통신사-CP간 불공정 수익배분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(하반기)
- SO-PP간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및 지급절차 관련 금지행위 심사 기준 마련 예정(하반기)
- 방통위·오픈마켓사업자·콘텐츠개발자가 참여하는 '민관협의체'를 통해 '모바일 콘텐츠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' 이행점검(하반기)
- 외주제작 분쟁조정 제도 도입 등 방송법 개정(10월 국회제출)
 - ※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방송법 개정안 재입법 추진
- '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종료(12월)

3-1. 생산적 소통사회 실현

◆ 인터넷규제 개선, 윤리 교육·홍보 강화, 인터넷 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생산적 소통사회 실현

가. 건전한 소통과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

□ 개 요

-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인터넷 게시판 중심으로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여 시행('07.7월)하였으나,
 - '10년 이후, 트위터 등 해외 SNS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 제기

※ '12년 업무보고 : 생산적 소통사회 실현을 위해 본인확인제 재검토 추진('11.12.29)

□ 추진 실적

- 본인확인제 관계부처TF(방통위, 행안부, 법무부, 경찰청 등) 구성 및 운영
-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선도를 위한 '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' 주간행사 개최 및 온·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추진
 - 인터넷 윤리교실, 등 다양한 교육(9월말 54,511명 교육)·홍보(6~7월 버스 지하철 등) 실시
-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(8.23)
-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후속 대책 수립(9.28, 국가정책조정회의)
 - 제도 효력 상실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피해방지 방안 마련

□ 향후 계획

- 국회 보고, 공청회 개최 등 사회 각계 의견 수렴(10월 중)
-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법률 개정 추진(11월)

나.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

□ 개 요

- 음란물, 불법스팸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해 불법·유해 정보 유통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전개

□ 추진 실적

< 온라인 음란물 유통 방지 >

- 방송통신심의위에 신고접수용 1,377 운영 및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여 음란물·유해정보를 집중 모니터링(연중)
 - 주요 포털사 중심의 자율심의협의체를 통하여 아동 음란물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실시('12.2~8월, 7,170건)
-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음란물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요구(연중)
- 음란물 확산의 온상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'12.5월부터 등록제 도입·시행(114개 사이트 등록)
 - ※ 미등록 업체 75개사이트 검찰 고발(7.12)
- 청소년 보호를 위한 PC('08년~) 및 스마트폰용('12.6월~)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
 -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계약시 차단 S/W 설치에 대해 고지토록 하고 ('12.6월~)초중고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홍보 협조 요청(교과부, '12.8.30)

< PC용 음란물 차단 SW 보급 현황 (방통심의위, 단위 : 건) >

연도별	'08	'09	'10	'11	'12.8월	합계
SW보급건수	123,129	1,178,446	569,326	692,275	489,194	3,052,370

<불법 스팸 유통방지>

- '12년 상반기 국내 스팸 유통현황 측정 및 공개(9월)
 - '12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의 스팸 유통현황을 측정하여 서비스별, 사업자별 스팸발신량, 수신량 순위 등 공개
 - ※ 1인 1일 휴대전화 문자 스팸 수신량 '11년 상반기 대비 42.9% 감소, 이메일 스팸 수신량 '11년 상반기 대비 31.4% 감소
- 인터넷 게시글의 스팸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차단할 수 있는 「게시판 스팸 실시간 차단 서비스」 개시(4월~, '12.8월 97개 홈페이지 이용)
- 다량 전송이 가능한 웹팩스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, 기술적 조치, 스팸발신자 제재방안 등의 내용으로 「팩스스팸 대응방안」 마련(9월)

□ 향후 계획

- PC 및 스마트폰용 음란물 차단 S/W가 청소년과 가정의 필수 프로그램으로 확산되도록 추진(연중)
 - 청소년 이용자 대상, 이통사의 음란물 차단서비스 제공 법제화 검토
- 온라인 음란물 심의 및 시정요구 수요에 대응하여 모니터링 인력 증원(30→60명) 및 통신심의 절차 신속화(주 1회→2회) 추진
- 학부모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, 음란물 차단활동 강화 추진('13년 신규예산 편성)
-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업무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하고, 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(10~11월)
-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 추진('13년 상반기)
 - 악성 스팸 형사처벌 상향과 과태료 부과액 현실화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스팸방지 의무 강화 등
- 스팸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('12.12월)
- 좀비PC 發 스팸발송 차단대책 추진('13년 상반기)

3-2. 안전한 사이버환경 구축

◆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환경 구축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, DDoS-해킹사고 방지 및 정보보호 글로벌 리더십 강화 추진

가. 개인정보 보호 강화

□ 개요

- 개인정보 유출 및 위치정보 불법수집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, 인터넷상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마련

□ 추진 실적

- 중소기업사업자 대상으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'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' 구축·운영(5월)
- 스마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포럼 창립 및 공개 세미나 개최(5월)
 - ※ '잊혀질 권리', '빅데이터' 등 국내·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이슈 논의 진행
-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제한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행(8월)
 - 법 위임규정 및 세부 시행방안을 담아 시행령·고시 개정 시행(8월)
-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규제도 교육·홍보 등을 위한 '인터넷 내정보 지킴이' 캠페인(9~10월)
-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보호 법규위반 사업자 조사·처분(연중)
 - 소셜커머스 13개 사업자, 넥슨 등 조사 및 행정처분(과징금 등)

□ 향후 계획

-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검출 및 삭제 등을 위한 중화권 개인정보 보호 센터 설립(11월)

나. 해킹사고 선제적 대응

□ 개 요

- ICT 기술발전과 더불어 지능화·조직화되고 있는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·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인터넷 안전성 제고

□ 추진 실적

- 기업 정보보호 체질 개선
 - 기업에 대한 보안관리 기준을 강화하고,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·공포(2월) 및 시행령 개정(8월)
 - ※ 정보통신망법 주요 개정내용 : 안전진단 제도 →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 및 등급제 도입, 정보보호 사전점검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제도 신설 등
- 인터넷 침해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 강화
 - 국내 도메인 등록 웹사이트 현황을 조사하여 악성코드 은닉 탐지 대상 웹사이트 확대(180만개→200만개)
 - 대국민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정부합동 ‘정보보호의 날(7월2째주 수요일)·달(7월)’ 제정 및 정보보호 행사 개최
 - ※ 해킹방어대회(7.3), 국제 정보보호 컨퍼런스(7.11), 사이버공격 시나리오 공모전(7.11), CEO 초청 전략 간담회(7.12), 개도국 초청 정보보호 교육(7.9~13), 청소년 IT 보안캠프(8.4~5)

□ 향후 계획

- 기업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고시 제·개정(11월)
 - ※ 관련 고시 : 정보보호 사전점검에 관한 고시(제정), 정보보호 조치에 관한 고시·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개정)
- 웹하드 및 모바일앱 악성행위 사전 점검시스템 구축·운영(12월)
- 해킹, DDoS 공격 등 인터넷 침해사고 모니터링 강화(지속)

다. 보이스피싱 방지(발신번호 조작방지)

□ 개 요

- 범죄조직이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조작된 발신번호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가 지속 발생
 - ※ '06년~'11년까지 6년간 총 34,332건, 3,611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, '12.7월말 기준 4,207건, 피해액은 46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발생(경찰집계)

□ 추진 실적

- 전기통신사업법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부과 관련 규정을 신설 추진(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, 9월)
 - ※ 통신사업자는 조작된 송신인의 전화번호 차단 또는 원번호로 정정송출, 이용자에게 국제전화 발신안내, 기술적 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
- 입법화 이전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'발신번호 조작방지 가이드라인' 제정 및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배포(7월)
- 전화와 가짜홈페이지, 문자와 가짜홈페이지 연계 등으로 지능화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(피싱)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마련(10.5)
 - ※ 보이스피싱(발신번호조작), 스팸문자, 가짜홈페이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內에 「피싱대응반」 운영예정('13.1월)

< 종합대책 주요내용 >

- ◆ (기술적 조치) 발신번호가 조작된 전화(문자) 차단, 휴대폰에서 문자 발신번호 변경 금지, 인터넷 발송 문자 식별기호 표시, 국제전화 차단서비스 개발 등
- ◆ (관리적 조치) 피싱에 이용된 가입자 회선 해지, 피싱사이트 신고절차 및 모니터링 강화, 피싱 주의보 도입 등 이용자 보호 활동 강화 등

□ 향후 계획

- 피싱방지 종합대책 세부 시행방안 마련 및 시행('12.10월~)
- 공공기관 등 사칭 국제전화 호 차단('13.1월~)

3-3. 이용자 중심의 권익증진

◆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폰·VoIP 요금감면 개선, 이용요금의 부가세 면제 및 소득공제 추진, 통신요금 및 전자파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

가.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강화

□ 개 요

- 장애인용 방송수신보조기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확대
-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인,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교육 실시
- 장애인, 저소득층 등의 통신서비스 접근성·편리성 제고를 위해 요금감면 및 통신중계서비스 운영

□ 추진 실적

-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인터넷전화의 통신요금 감면 범위에 포함(2월) 하였으며, 요금감면 신청절차 간소화(2월)
 - ※ 사회적 취약계층의 이동전화, 시내·외전화, 인터넷전화,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중('11년 514만명, 5,637억원 감면)
- 장애인, 저소득층 등의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전화 요금 감면제도 시행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, 2월)
 - ※ 장애인·국가유공자의 월 통화료 50% 감면,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입비·기본료 면제 및 월 150도수(최대 450분) 무료통화 제공
- 점자·음성 고지서비스,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음성지원 등 '장애인을 위한 통신가이드라인' 마련(6월)
-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방송사를 61개사로 확대('12년 예산 : 32억원)
 - ※ 지원대상 : 28개사('08년)→37개사('09년)→46개사('10년)→53개사('11년)→61개사('12.9월말)
- 청각·언어 장애인 통화지원 내용, 통신중계서비스 운영 등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

□ 향후 계획

- 장애인 방송수신보조기기 약 2만대(자막방송수신기 9,170대, 화면해설방송수신기 7,500대, 난청노인용수신기 3,000대) 추가 보급(연중)
- 이통3사와 협력하여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SNS 활용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교육 지속 실시(연중)
-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요금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전화 요금감면 구조 개선(12월)
- 청각·언어 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지원을 위해 통신중계서비스에 통합번호(107)를 부여('13.1월 예정)

나. 이용자의 알 권리 제고

□ 개요

-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서 정보를 충분히 가진(Well-informed)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확대 필요
-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파 유해성 등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

□ 추진 실적

- 주거지 주변 기지국(무선국 5,552국), 가전제품(36종)의 전자파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발표(2월)
 - 인체보호기준 초과 사례가 없으며,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-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음성통화 및 유·무선인터넷 품질 등을 평가하여 공표(4월)
- 노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예방 교육 실시(5월~)

-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을 분리 표시토록 개선하고, 용어와 양식을 통일하는 등 요금고지서 대폭 개선(6월)
- 분산되어 있는 통신요금 관련 정보*를 통합·체계화하고,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며, 소셜 미디어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강화한 '통신요금 종합포털' 구축
 - 통신사업자연합회, 이동3사 등이 참여하는 '통신요금 종합포털 추진 협의회'를 운영하여 세부 구축계획 마련중
- * 요금제 및 약관 정보, 추천 요금제, 전문가 리뷰 및 이용자 경험·정보 공유 등
- 전자파 인체영향 연구결과 발표(5월) 및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 공개(7월)
 -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자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
- 다양한 통신서비스 등장, 이동통신 이용량 증가 등에 따라 예측하지 못하는 통신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(빌쇼크) 방지를 위해,
 - 요금한도 초과 등에 대한 사전고지의 주체 및 상대방, 고지대상 서비스, 고지의 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 마련(7월)
- 상대적으로 전자파에 취약한 어린이·청소년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이용 가이드라인 제정(9월)

□ 향후 계획

- LTE 등 '1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실시(하반기)
- 사업자별 요금고지서 개선 이행실태 점검(10월)
- 시청각장애인 대상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(12월)
- 통신요금 종합포털(스마트 초이스)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요금, 시장동향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(12월)

Ⅲ. 주요 현안과제

1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후속대책

□ 개요

-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결정(헌재, 8.23)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필요
 - 무분별한 표현의 자유 남용을 통한 악성댓글 증가 및 이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사회적 피해 확산 우려

※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후속대책 수립(국가정책조정회의, 9.28)

□ 주요내용

- (자율규제 강화) 포털사 자체 모니터링 인력 증원 및 중소 사업자 대상으로 악성댓글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발·보급 추진
- (피해예방 강화) 임시조치 기준·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자율 판단으로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한 경우 배상책임감면 규정 신설
 - ※ 불법게시물을 방치하여 이용자 피해 발생시, 해당 포털사 손해배상책임 명문화
- (권리구제 강화)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기간 단축 온라인 분쟁조정제도 도입,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센터규모로 확대 개편
- (교육·홍보·민관협력 강화) 선플달기·선플기부 등 범국민 캠페인 추진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, 정부-포털사-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

□ 향후 계획

- 국회 보고, 간담회, 공청회 등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(11월)

2 이동전화시장 단말기 보조금 조사

□ 보조금 개요

- 이통사 판매촉진비 등의 재원으로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구입 할인액과 제조사 장려금을 총칭
 - '00.6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령으로 보조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다가 '08.3월부터는 기업의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 차원에서 허용하되,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규제

※ 방통위 출범 이후 '10.9월, '11.9월 총 2회에 걸쳐 시정명령·과징금(319억원) 부과

□ 시장현황 및 조치내용

- '11.11월 LTE폰 출시 이후 시장이 간헐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방통위는 이통3사에 대한 긴급중지 요청과 CEO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 유도
 - 최근 시장모니터링 결과 보조금 경쟁이 과열된 것으로 파악되어, 부당한 이용자 차별문제에 대해 사실조사 개시('12.9.13)
- 조사관 20여명을 투입하여 이통3사의 본사·전국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전산자료 분석 중

□ 향후 계획

- 사실조사 결과 정리 및 시정조치(안) 심의·의결(12월)

3

전자파 등급제 도입

□ 개 요

-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폰 등 무선 설비에 전자파 등급제를 도입하도록 전파법을 개정(5월)
- 개정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 등급기준, 표시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을 추진

※ 세계보건기구(WHO)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('11.5월)

□ 추진 실적

- 전자파 등급제 연구반을 구성·운영하여 고시안 마련(2~8월)
- 전자파 등급제 고시(안) 행정예고 및 공청회 개최(9월)

□ 고시(안) 개요

- (표시대상)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 대상
- (등급기준) 휴대전화의 경우 2등급, 무선국은 4등급 분류
- (표시방법) 국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포장상자 또는 해당 무선설비에 표시

□ 향후 계획

- 전자파 등급 관련 고시 제정(11월)